

“손님 3명 중 1명 상생카드 사용... 지원 끊는다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가보니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시장 상인들 일방적 행정 규탄 광주시 “혜택·물량 논의 예정”

“세 명 중 한 명은 상생카드를 쓰는데... 손님 줄어들까봐 걱정되네요.”

7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곳 말바우 시장은 2만평 규모에 500여개의 상점이 들어 서있다. 이 중 상생카드 가맹점은 67곳이다.

9년째 말바우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순희(66)씨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상생카드로 과일을 구매하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축소된다니 이해를 못 하겠다”며 “물가 폭등에 손님도 없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상인들은 어떻게 장사하나”고 토로했다.

말바우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김미희(66)씨는 “지역화폐 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또 뭐가 있냐”며 “확대를 해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축소를 하는 것은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처사.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7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송민섭 기자

지역화폐는 지자체 가맹점에서 결제액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10%나 7%등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지역 시장이나 점포에서 장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7%를 할인해주는 ‘광주 상생카드’를 발행 중이다. 가맹점 숫자도

상당하다. 이날 기준 광주 시내 6만7560곳의 상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사용 규모도 국비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3조1242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 요구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삭감 명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이 크지 않고 원래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올해의 경우 6050억원이 편성됐었다.

당연히 지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창순 말바우시장 상인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시장이나 가맹점에 가서 보면 시장 손님들의 30% 정도는 상생카드를 쓴다. 성과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북구 용봉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주한(45)씨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상생카드 결제하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지역화폐는 모두 잘 만든 정책이라고 칭찬한다”며 “대형마트는 상품권이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우리 같은 상인들은 죽을 맛”이라고 했다.

올해 광주에서 발행하는 상생카드 할인 지원금 예산은 총 874억5600만원이다. 이중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165억5600만원이다.

내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화폐 운영 예산도 쪼그라들어 할인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상생카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장 혜택을 축소하거나 발행량을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지난번처럼 다시 편성될 수도 있고, 아직 본 예산 편성 전이라서 시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상인들이 많이 찾는 정책인만큼 국비축소에 대한 계획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전해연 인턴기자

광주 시민단체 ‘보조금 축소·집시법 송치’ 반발

일제강제동원지원단체 문제삼고 환경단체 집회까지 검찰 송치 정부 탄압 기조 공동대응 선언

최근 정부가 시민사회를 불법, 영리단체로 몰아세우면서 압박을 가하자 광주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광주 시민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본격적인 압박은 지난달 23일 한 언론사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약정서 논란 보도가 기점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는 대신 국내 기업 등으로부터 모인 출연금으로 배상을 대신하겠다고 발표한 ‘제3차 배상안’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A언론사는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0여년 전 소송 원고들과 맺은 약정서에 배상금 20%를 받아간다’고 보도했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시민모임을 겨냥한 ‘과거사 브로커’,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의 보도가 쏟아

아졌고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시민단체를 향한 압박도 본격화됐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민간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시위나 집회 활동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환경

운동연합(환경연합)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개 차로 안에서 행진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달리 집회 당일 도로에 누워 점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연합은 “점거 시위를 벌인 곳은 도로가 아닌 탐방로이며, 폭력행위나 소음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화시위였다”며 “10여년간 단

체 활동을 하며 수 많은 집회를 진행했지만 이런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며 송치된 경우는 처음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정부의 탄압기조에 맞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현 정권이 노동단체에 이어 시민단체 또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광주 국민의회 광주시당 앞에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